

#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헌법위반 피하고 내·외치 총괄

## 3野 공조 '박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론' 로드맵은?

### 과도기 혼란 줄일 수 있는 최선책...과도 내각 구성 최우선 최순실 기소 이후 공소장 내용 따라 탄핵론 힘 받을 수도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민주통합당이 '박 대통령 퇴진'을 최종 목표로 정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정국에서 일단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한 셈이다.

일단, 야권이 내놓는 공통적인 방정식은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헌정 중단 사태를 피하고 과도 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과도 내각 구성=야권은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과도내각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여야가 합의한 총리로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할 경우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선 선행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정 혼란을 수습할 주요 책임 축인 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통령 퇴진 선언→여야 합의 총리 선출→조기 대선을 포함한 정치일정 제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총리 권한=과도내각 총리의 권한 설정 문제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야권 일각과 학계에서는 헌법 71조에 의거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리가 내치와 외치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귀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귀위'나 '사고'로 볼 수 있는지는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헌법 7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개헌 추진=과도내각에서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을 하면 박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만큼 차제에 대통령 퇴진 문제와 개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다른데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권력 구조개편의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며 개헌의 선행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탄핵론 부상=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현재의 탄핵심판에만 최장 180일이 걸리는 데다,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선불리 탄핵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현재의 탄핵심판에만 최장 180일이 걸리는 데다,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선불리 탄핵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현재의 탄핵심판에만 최장 180일이 걸리는 데다,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명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실히 조사 받겠다더니... 박 대통령 조사 사실상 거부

### 변호사 '친박 정치인' 유명하 선임... '대면조사 보다 서면조사 바람직'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 대응에 들어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자신을 도왔던 원조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인 유명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선임 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서 요구한 16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 변호사는 회견에서 "16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조사가 언제쯤 가능한지'는 질문에는 "기록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 변호인이 16일 조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16일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본인 동의 아래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직무 수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

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박 대통령의 현재 심정을 전했다.

부산 출신인 유 변호사는 창원지검·광주지검 순천지청·청주·인천·서울북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의 국가인 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최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후보로 서울 송파구에 공천을 받았다가 김무성 전 대표의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출마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는 이날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私費)로 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광범·임수빈 물망... 채동욱·윤석열도 거론

### 野추천 '최순실 특검' 누가되나

#### 검사 출신 보다 판사 출신 선호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을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 후보 추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국한된다.

일단, 야권에서는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보였다는 평가다.

범무법인 중인 임수빈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2008년 광주병파동 관련 PD수첩 제작진의 기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직했다.

내곡동 특검 때 이광범 특검이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6명 중 한 명이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보에 윤석열 검사 등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특검 지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의 경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흔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다.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전 총장에 대해 "타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역시 거론되지만 검찰기밀 유출 의혹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후보 추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과 현직 검찰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이 '진정'에 칼을 겨누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세월오월' 전시 무산 진상 밝히고 관련자 처벌하라"

###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 문체부 사과·방지대책 등 촉구

광주지역 문화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걸개그림 '세월오월' 전시 파행 과정에 정부 압력(광주일보 11월 15일자 1·3면)이 행사된 데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총연합·광주지역미술인협회·광주미술인협회는 15일 공동으로 '홍성담 세월오월 관련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참혹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또 청와대에서 작성한 '진보 문화예술단체 처벌문서'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삶과 권익을 짓

밟는 추악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도 이날 '윤장현 시장, 세월오월 정부 외압 시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늦어도 한참 늦은 부끄러운 고백일 뿐이다"며 "이 정도 압력에 굴복했던 시장이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예술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윤 시장은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밝히고 지금까지라도 '세월오월'을 전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길고 긴 보험범죄의 꼬리」**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피해규모 약 4조 5천억원(2014)/ 17기당 23만명의 보험료 누수(보험연구원 2016)

**보험사기 신고센터**  
한화손해보험 호남장기SIU 062-513-5889  
(www.hwgeneralins.com) 본사 장기SIU 02-316-0830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insucop.fss.or.kr)

**보험범죄 근절, 당신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09.30)**  
보험사기죄 신설,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 (2천만원 → 5천만원) 강화  
이득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상습범 1.5배 가중처벌, 미수범도 처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최고 5억원 → 최고 10억원으로 상향  
병원 등 내고급발자 포상가산금 50% → 100% 확대지급  
단, 장기보험 사기적발 시 최저 100만원 지급

**이런 병원과 환자가 있다면 신고하세요!**

- 환자유치(압선) 행위, 실제 진료하지 않은 항목을 허위청구하거나 과잉진료 (외출·외박 등)을 묵인, 허가받은 병상 초과 또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 발급·날조하거나 사고를 위장하여 허위 치료 또는 입원처리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병원(의사)이나 환자
- 중대한 병력(암, 에이즈 등)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장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보험에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기 사례 등

고객 보호를 위해 한화손해보험이 보험범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